F1 국비지원 50억…'적자줄이기' 비상

광주~완도간 고속도·혁신도시 진입로 누락

광주시 이노비즈센터 건립비 등 1225억 추가

올해 F1대회 국비 지원예산이 고작 50억원에 그치면서 F1 적자 줄이기에 돌입한 전남도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애초 300억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국 50억원의 지원비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열악한 재정형편에 수백억원의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광주시

광주시는 지난 31일 국회 예산심의에서 모두 38건의 사업에 1225억원의 국비를 추가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설치사업 등 총 12건의 신규사업에는 185억원, 그리고 광주연구개발특구육성을 비롯한 22건의 계속사업에 96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전남대병원 본관동 개보수사업 등 지역대학 지원사업 4건에는 74억원의 국비를 반영시켰다.

광주시가 이처럼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강운태 광주시장과 국회 예결위원인 강기정·장병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시점에 맞춰 강운태 시장과 강계두 경제부시장, 문인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간부들이 여의도 부근 숙소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밤낮없이 여야 예결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신규 반영된 사업중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설치사업은 5000억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정부의 반대로 예산이 누락될 뻔 했다. 하지만, 지난 31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교과위와 예결위가 막판 조율 끝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교과부가 차세대 가속기의 타당성을 조사·결정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광주설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설치 근거가 없어 차질을 빚어왔던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은 '문화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걸림돌을 없앴으며, CT기반조성비 10억원도 함께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 330억원이 투입되는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실마리가 되는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광주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3D 융합산업육성(45억원), 클린디젤자동차산업육성(120억원), 광주~순천 철도사업 용역비(5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60억원) 등도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전남도

전남도가 'F1 코리아 그랑프리 지원'명목으로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은 50억. 전남도가 애초 요구했던 운영지원비 300억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누락됐던 지원비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44억원으로 증액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94억원이 삭둑 잘려나가면서 50억원만 지켜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결국 대회 개최비용 9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개최권료 재협상을 통해 200억원 가량을 낮춰 현재 6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규모를 200억원대로 낮추려던 전남도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그나마 이번에 확보한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F1 그랑프리 지원'이라는 포괄적 예산 지원인데다,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운영비' 지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첫 운영비 지원'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가 국회 예산 확보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했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끝내 확보에 실패,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이후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줄기차게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 끝내 상임위원회에서 확보했던 98억원마저 전액 누락됐다.

정부가 애초 398억원의 국비를 투입, 건설키로 했던 혁신도시와 국도 1호선까지의 연결도로(0.89㎞·398억원)도 올해 실시설계비(28억원)조차 확보하는데 실패,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압해~화원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착공예산(10억원), 국립심혈관센터 건립(100억), 하의~신의 연도교(100억), 호남 제주 해저고속철(100억) 등도 정부안에서 제외된 뒤 국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2년 국비 추가반영 주요사업 (단위:억원)

	사업명	정부예산안	국회반영액	증감액
광주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설치	0	5	5
	CT연구원 설립	0	5	5
	도시광산기술원 설립	0	3	3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0	10	10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0	60	60
	광주연구개발특구육성	50	70	20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30	50	20
	클린디젤부품산업육성	100	120	20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576	676	100
	광주하계U대회 지원	234	327	93
전남	F1 대회 지원	0	50	50
	영암호 통선문	0	300	300
	수출 양식장 조성	0	2	2
	실감미디어 R&D산업 기반구축	0	15	15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620	680	60
	호남고속철도 건설	1조8000	1조8300	300
	여수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0	5	5
	화순 타월클러스터 조성	0	10	10
	신안 지도~임자 연륙교 건설	0	20	20

CT 연구원 광주 설립 확정

〈문화콘텐츠기술〉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CT(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광주 설립이 확정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되고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진척이 없었던 CT 연구원 광주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CT 연구원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하고 유인촌,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 설립에 동의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콘텐츠기술 주관연구기관을 광주과학기술연구원으로 지정하고 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T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CT 연구원을 광주에 설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CT 연구원 설립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3개 축이 마련됨으로써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가공무원 3108명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공무원을 지난해보다 761명 많은 3108명을 뽑는다.

직급별로 5급 367명, 7급 561명, 9급 2180명 등이다. 정년퇴직이 올해 257명, 내년 1092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신규채용 요구가 많아 선발 인원이 늘었다.

9급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44명으로 올해보다 28명 늘어나고 장애인 구분 모집은 7급 40명, 9급 99명 등 139명으로 역시 31명 증가한다.

지역구분 모집은 5급 40명, 9급 621명 등 661명으로 올해보다 329명 많다. /연합뉴스

전남 10가구중 3가구 월 100만원도 못번다

전남도 첫 사회조사

전남지역 주민 10명 중 3명은 월평균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도내 5000가구 9300여명을 대상으로 '제 1회 전남도 사회조사'를 벌인 결과, 지역 주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200만원대가 22.7%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소득·소비, 가족·가구, 복지 등 12개 분야 49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8.6%, 50만~100만원대도 16.7%에 달해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응답자가 35.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200만~300만원은 18.4%, 300만~400만원 12.6%, 400만~600만원 7.1%, 600만~800만원 2%, 800만원 이상 1.8% 등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지출은 100만~200만원대가 26.4%로 가장 많았고 지출항목은 식료품비(26.2%), 보건의료비(16.1%), 교통비(14.9%), 교육비(13.9%) 순으로 많았다.

지역민들은 또 취업 애로 사항으로 '지방대 출신'(19.6%), '취업 배경(인맥) 부족'(16.8%) 등을 꼽았다.

전남도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개발계획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시·군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26명, 반대 41명, 기권 35명으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 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또 한미FTA 피해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하루 이상 지정토록 했다.

'고(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시·의회 "무안반도 통합해야 성장"

행정개편 추진위에 건의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지난 30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목포, 무안, 신안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와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역사, 문화,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신도시 지역의 행정구역 이원화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면서 "통합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농어촌 균형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제제 개편추진위는 희망시·군으로부터 건의서를 제출받아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주민에 의한 자율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

'민주화 대부' 추모 발길 이어져

'사회장' 3일 영결식

광주YMCA 합동분향소

'민주화의 대부'로 통하는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 30일 오전 5시31분 6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김 상임고문은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아온 데 이어 지난달 29일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차 합병증이 겹치면서 패혈증으로 한달만에 숨을 거뒀다.

김 상임고문 측은 "뇌정맥혈전증의 근본적 치료가 안 되고 폐렴, 신장염 등 합병증까지 겹치면서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상임고문은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수배와 투옥을 반복했으며,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는 재야 출신 정치인 그룹의 좌장으로서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꿈을 이루진 못했다.

서울대 재학중이던 71년 서울대 내란음모사건으로 수배받은 것을 시작으로 재야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그의 청.장년 시절은 민청련 사건·전민련 활동 등으로 수배와 투옥을 되풀이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인 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경감 등에게 무려 10차례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는 등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그가 투병한 파킨슨병은 고문 후유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95년 당시 민주당 부총재로 제도정치권에 진입한뒤 이듬해 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서울 도봉갑에서 내리 3선에 올랐으나,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양심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꼴찌를 기억해달라"며 경선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좌절을 경험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오랜 동지이면서도 정책 등에서 이견이 있을 때 '할 말은 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거치며 개혁성과 탁월한 논리력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는 진보세력까지 포함하는 민주세력 대연합을 시대적 과제로 삼아 통합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내년 총선에서 재기를 모색해왔다.

유족은 로버트케네디 인권상을 공동 수상한 부인 인재근씨와 1남1녀(병준·병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김 상임고문을 추모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은 지난 30일 오후 5시부터 2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YMCA 무진관에 지역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 고문의 장례는 5일장의 '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오는 3일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다.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으로 정해졌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민주화의 대부'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이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YMCA 무진관에 설치한 합동분향소에서 1일 어린이들이 헌화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농촌진흥청장 박현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에 박태호(59)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또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서필언(56)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을, 식품의약안전청장에 이희성(58) 식품의약안전청 차장을, 농촌진흥청장에 박현출(55)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함평 출신인 박 신임 농진청장 내정자는 목포고와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25회로 공직에 들어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기획조정관·식품산업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임동욱기자 tuim@

남도학숙 입사생 353명 선발

남도학숙이 2012년 신규 입사생 353명을 선발한다.

광주지역 선발인원은 178명으로 신입생 112명(일반계열 108명·예체능계 4명), 대학원생(2명)을 포함한 재학생 66명이다.

전남 선발인원은 175명으로 신입생 109명(일반계열 105명·예체능계 4명), 대학원생(2명)을 포함한 66명이다.

입사 희망자는 시·도 홈페이지에서 입사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광주시청 민원실이나 전남도내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도 실·국장 프로필

양복완 기획조정실장 행시 25회로 추진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꼼꼼한 일처리와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도청 실·국장을 두루 거친데다 부단체장 등 일선 자치단체의 경험이 풍부한 점을 인정받아 전남도의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

▲영암(53) ▲광주일고 ▲전남대 경제학과 ▲경제과학국장 ▲순천시 부시장 ▲관광문화국장

박내영 경제산업국장 행시 24회 출신. 합리적인 인간관계로 선후배간 신망이 두터운 편이지만 조직 장악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자유치 분야를 제외한 거의 전 분야의 실·국장 경력을 가진 도청내 유일한 부이사관(3급)이다.

▲장성(58) ▲광주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기획관 ▲자치행정국장 ▲목포시 부시장

정인화 관광문화국장 기획력과 업무능력이 뛰어나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 오해를 받기도 한다. 행시 26회. 일선 부단체장 경험과 중앙부처 교육 경력은 많지만 사업분야 국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양(55) ▲광주공고 ▲전남대 행정학과 ▲정책기획관 ▲감사관 ▲여수시 부시장

윤진보 건설방재국장 7급 공채 출신으로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2006년부터 4년여동안 F1 지원과장과 지원담당관을 맡아 산파 역할을 했다. 건축직으로 건설방재국장에 올라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됐다. 조직을 어떻게 아우를지가 관심사다.

▲광양(56) ▲조선대 토목공학과 ▲F1 지원과장 ▲F1대회 지원담당관 ▲공무원교육원장

/장필수기자 bungy@